



EU, 금융거래세 도입 합의 불발

최 원 선임연구원

- 11월 8일 EU 27개국 경제·재무장관회의에서 금융거래세(FTT: Financial Transaction Tax)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독일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한 적극 추진 세력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비(非)유로존 간 상반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 도달에 실패함.
 - EU 집행위원회는 금융거래세 도입 시 초단타매매 등 금융시장 불안과 투기 증폭 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, 유로존 재정위기에 책임이 있는 금융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되며, 시장에 큰 부담 없이 연간 570억 유로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설명함.
 - 그러나 영국 재무장관은 금융거래세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나 유럽이 먼저 도입할 경우 금융투자자들이 미국 또는 홍콩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함.
 - 또한, 금융거래세 도입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인 만큼 비유로존 EU 국가들은 대체로 반대 의사를 밝힘.

- 금융거래세 도입과 관련한 유럽 내 찬반 논란은 과거 몇 년간 계속되어 왔고 EU 집행위원회의 정식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으나, 이번 합의 불발로 향후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게 됨.
 -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모든 국가의 합의 도달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로존 국가들 만이라도 먼저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, 오스트리아 재무장관도 이러한 의견에 찬성함.
 -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 등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도 금융거래세 도입에 반대 또는 유보적인 의견을 가진 나라가 적지 않아 2012년 중 유로존 국가들만의 별도 합의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함.

(FT, 11/9)